

MAR. 25 '94 11:09 JUNG SINDE; JAPANESE RULE 365_1109

3.24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3.24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현재 한.일간의 현안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종의 협의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더욱이 김영삼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NHK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황초청의사를 표명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민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국가와 유엔인권위원회의 등의 국제무대에서까지 중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불이행에 대한 규탄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이행을 협의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범죄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 운운하며 서둘러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불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진상규명 요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일본정부에게만 맡긴채 미우직한 태도를 취하여 왔다.

한.일 양정부기 진실도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급변 한 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마땅한 법적 책임이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시호부적응협약'에 가입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2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월 7일 일본정찰정에 규위안부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정찰청은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범죄를 처벌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전쟁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일본은 전쟁범죄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일본이 전심으로 세계에서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데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와 종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호부적응협약'에 가입한 것을 촉구하라.

3. 전후처리 해결없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도 법적 책임이행도 하지 않은 일본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원한다면 누가 지지하겠는가. 진정한 일본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원한다면 그들이 과거, 아시아국가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명백한 법적 책임이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급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뜻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국가에 저지른 침략전쟁의 인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는한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국가간에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지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가 화해평화의 입장에서 진실로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원한다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침략전쟁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라.

1994년 3월 2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 111 차 4호 서약>